

조합·시공사·철거업체 선정 비리·연결고리 규명 수사력 집중

경찰, 광주시청·동구청·조합 압수수색...조합장 등 14명 무더기 입건 조폭 출신 문흥식 전 5·18구속부상자회장 입건 전 미국 도주...수사 '허점' '건물 붕괴' 전담수사본부, 백솔건설 대표·현장공사 책임자 영장 신청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 건물 붕괴사고'와 관련, 경찰 수사가 공사업체 선정 권한을 쥐고 있는 재개발조합으로 향하고 있다.

학동 3-4구역 재개발사업에 참여했던 폭력조직 출신 문흥식 전 5·18구속부상자회장 등 7명을 무더기로 추가 입건하는 한편, 조합과 광주시, 동구청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조합과 시공사, 철거업체 간 연결 고리 및 계약 과정에서의 불법행위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일각에서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문 전 회장의 미국 출국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는 등 수사력에 허점을 드러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광주경찰청 전담수사본부는 15일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 공사업체 및 하도급 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여부를 확인, 문 전 회장과 학동 4구역 조합장 등 7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입건자는 14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재개발구역 내 철거업체 선정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을 일부 확인해 피의자로 입건하는 과정에서 문 전 회장의 해외 도피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문 전 회장은 지난 13일 미국행 비행기에 탑승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신청해 조기에 송환하는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문 전 회장은 애초 붕괴 사고 다음날(10일) 광주 일보와의 통화에서 "3-4년 전 학동재개발에서 손을 뗐다. 컨설팅 등만 하고 철거사업과는 관련없다.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4구역 재개발조합측도 당시 문회장의 사업 연관성을 부정했다. 하지만 경찰은 학동 3-4구역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재개발·재건축 용역이나 대행업체를 세우고 아내에게 운영을 맡기는 형태로 문 전 회장이 사업에 관여한 정황을 일부 파악한 상태다.

경찰은 또 '학동 3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한솔기업, 다원이앤씨 등이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에도 이름을 올리며 관여한 점, 이들 업체들을 통한 불법 다단계 하도급 계약이 체결된 점 등에 주목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입건한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이들 간 연결 고리를 캐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광주시청 도시경관과, 광주 동구청 건축과와 민원과,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조합 사무실 등 3곳을 압수수색,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특히 직원이 3명으로 자격증을 갖춘 기술자도 2명(기사 1명·기능사 1명)이 전부인 '미나' 회사인 백솔건설이 한솔기업으로부터 별다른 실적 없이도 철거 용역 일부를 넘겨 받은 점, 다원이앤씨로부터 같은 재개발사업구역 내 '석면철거' 공사까지 일부 맡은 '혜택'을 본 점을 들어 한솔기



동구청 민원실 압수수색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철거건물 붕괴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15일 오후 광주 동구청 민원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업무상 과실 치사상 등 혐의로 재하도급 업체 대표 등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광주시·동구·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조합사무실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업과 백솔건설, 다원이앤씨, 조합 간 관련성에 의심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경찰은 아울러 붕괴 사고 당일 소홀한 안전 조치로 건물을 무너지게 해 무고한 시민들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로 백솔건설 대표인 굴착기 기사 A씨와 현장에 있던 한솔기업 현장 책임자 등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불법 다단계 하도급으로 이뤄진 학동 4구

역 재개발 사업지에서 법규를 무시하고 무리한 철거 공사를 강행해 사상자 17명이 발생한 인명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건설현장 오랜 약속 '월레비', 법원 판단은?

타워크레인 기사 16명에 6억 지급한 건설사 반환 소송 "근절돼야 할 관행이나 강제성 확인 안돼 반환청구 불가"

'월레비'는 하도급 공사업체들이 건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상납금으로, 업계에서는 '금형료'라고도 불린다. 아파트 등 고층 건물 공사에선 타워크레인 설치 필수로, 타워크레인이 움직이지 않으면 공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다. 이 때문에 공기(工期) 지연을 막기 위해 울며 월레비를 줄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건설 현장의 불공정 '관행'이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는 대표적 악습(惡習)이기도 하다.

최근 담양지역 A건설사는 공사 과정에서 16명의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월레비 명목으로 6억원이 넘는 돈을 지급했다며 광주지법에 '부당 이득금 반환' 소송도 냈었다.

4개 아파트 신축공사 과정에서 형틀·철근공사를 하도급 받은 이후 타워크레인 업체들과 임대

차 계약을 맺은 뒤 현장에 온 기사들에게 월 300만원 상당의 월레비 및 시간의 근무수당 형식의 빚돈을 지급했다는 게 A 건설사 주장이었다.

A 건설사는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업계 관행을 들어 시간의 근무수당 및 월레비 명목으로 월 약 300만원의 돈을 요구했다고 했다. 월레비를 주지 않을 경우 기사들이 작업 거부나 태업을 해 어쩔 수 없이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소송 과정에서는 이례적으로 A건설사가 지난 2016년 9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이들 타워크레인 기사 16명에게 지급한 6억5400만원의 월레비의 구체적 내역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명세서에는 타워크레인 기사 한 명당 4000만원 상당의 가뭇돈을 지급한 내역이 담겼다. 같은 기간 초과 근무 수당 비용까지 합치면 8억원이 넘는다.

법원도 "허위 회계처리가 이뤄지고 소득세 탈

루 등 불법적 결과가 발생한다"면서 "근절돼야 할 관행"이라고 판시했다.

광주지법 민사 11부(부장판사 전일호)는 "타워크레인 기사에 대한 월레비 지급은 도급사나 타워크레인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인건비를 합리적 이유 없이 하도급업체인 철근콘크리트 회사에 전가하는 측면이 있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도급 또는 위임사무에 대한 보수에 해당하는 점 ▲용역 또는 위험부담 대가와 사례금 성격을 가지는 돈이라는 주장도 "A사와 기사들 간 도급·위임·용역 계약 체결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월레비 지급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지급했다"면서 강제성이 확인되지 않아 민법(742조)상 '비체면제' (채무가 없는 것을 알면서 변제한 경우)에 해당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지혜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 곳곳서 터져나오는 부동산 투기 의혹

경찰, 광양시 세번째 압수수색 순천·담양서도 관련 의혹 제기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경찰 수사가 전남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광양시의 경우 시장의 부동산 투기·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 세 번째 압수수색에 나서다가 하남·담양·순천 등에서도 관련 의혹이 제기되면서 수사가 시작되는 모양새다.

15일 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1일 광양시청 총무과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이미 지난 4월 광양시 시장실과 자택, 시청 도로과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시장과 부인, 아들이 소유한 땅에 도로가 개설됐고 정 시장이 측근 자녀 등을 부당하게 채용했다는 고발장에 따른 것으로, 경찰의 세 번째 압수수색은 정현복 광양시장의 부동산 이해 충돌,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세부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양시 안팎에서는 경찰 수사는 정 시장 소환 조사를 남겨뒀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정 시장이 최근 한 달 넘게 병가를 내고 병원에서 혈액 질환 치료를 받고 있어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

도 제기된다.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순천시청과 직원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 건축과와 의회사무국 등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해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 안팎에서는 아파트 인·허가 관련 업무를 보는 공무원 2명과 퇴직 공무원 1명이 가족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과정에서의 불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은 담양군의 개발계획을 사전에 입수, 토지를 매입하는 등 부당한 이득을 챙긴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로 담양군의회 A 의원을 입건, 수사중이다. A 의원 부인은 보춘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앞두고 2018년 10월 자녀 2명의 명의로 담양군 고서면 보춘지구 내 토지 2093㎡를 여러 명과 나눠 사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은 A 의원 가족이 농지를 사들인 시기, 해당 토지가 개발사업지구 구획 안에 포함된 점 등을 토대로 경위를 조사중이며 A 의원은 투기와는 무관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